

취재원 제보, 약인가 독인가

거짓 제보자에 속지 않으려면 기본 원칙을 지켜라

박건식 / MBC 시사교양본부 부장

언론에 있어 제보는 양날의 검과 같다. 특종을 꿈꾸는 취재진은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정직하지 못한 제보자에게 잘못을 돌려야 할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제보자가 아니라 언론이다. 제보자들은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언론을 상대한다. 언론이 원칙을 갖고 제보자를 대하지 않으면, 자칫 제보자의 노리개가 되기 쉽다. 편집자 주

트럼프 집권 1년이 지난 2017년 미국.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가 법무장관에 취임하면서 열리게 된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공화당은 과반을 조금 넘는 52석이었는데, 장관이 되면서 공석이 된 이 자리 를 공화당이 차지할 경우 52석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공화당 상원의석은 51석으로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존 매케인(John McCain)이나 미트 롬니(Willard Mitt Romney) 등 대선후보급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표가 매우 절실한 상태였다.

앨라배마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고, 공화당 중에서도 가장 극우적 성향을 보이던 로이 무어(Roy Moore) 후보의 지지율은 49%로 민주당의 더 그 존스(Gordon Douglas Jones) 후보보다 6% 포인

트 앞서 나가고 있어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2017년 11월 9일 로이 무어 후보가 1970년대 자택에서 14세 소녀의 몸을 더듬는 등 10대 소녀 4명을 성추행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오자마자, 선거판세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무어 후보는 “내가 상원의원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며 워싱턴포스트를 고소할 것이고, 며칠 후면 그 기사의 동기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13일 다섯 번째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지만, 무어 후보는 이번에도 완벽한 거짓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런데 이즈음 제이미 필립스(Jamie Phillips)라는 여성인 로이 무어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다

“

워싱턴포스트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고수하고 제보자의 말을 꼼꼼하게 검증한 덕분에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제보자의 허위 제보 과정까지 모두 보도함으로써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2018년 풀리처상 탐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꼼꼼한 팩트체킹이 가져온 폐거였다.

”

며 워싱턴포스트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15살이던 1992년 무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까지 했으나 무어의 요구로 낙태한 경험이 있다고 제보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내 이야기가 나가면 무어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만만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필립스가 10대 시절 한때 앨라배마에 살았다는 주장과 달리 휴대전화 번호에 앨라배마 지역코드가 포함된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또 그녀가 직장이라고 밝힌 ‘NFM렌딩’에 확인한 결과 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면접을 봤다는 ‘데일리 콜러(The Daily Caller)’에서도 면접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정적 단서는 그녀가 2017년 5월 ‘고 펀드 미(Go Fund Me)’라는 모금 웹사이트에 올린 글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사이트에 제이미 필립스가 “진보 언론의 기만에 맞서 싸우는 보수 미디어 단체에 일자리를 얻어 뉴욕으로 떠난다”고 올린 내용을 찾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잠복 끝에 필립스가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 사무실에 걸어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진보 언론들이 편향됐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위장 스파이를 침투시켜 가짜 이야기와 영상 등으로 합정 조사를 벌이는 곳이다. 즉, 보수단체에서 워싱턴포스트에 위장 스파이를 침투시켜 무어 후보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한 다음, 워싱턴포스트가 이를 기사화하면 그것을 부인하고 뒤집는 방식으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무어 후보를 구출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허위 제보의 단서를 찾은 것은 워싱턴포스트 취재진의 팩트체크와 엄밀한 배경 조사 덕분이었다. 제보자 또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엄밀하고 꼼꼼하게 그 말을 검증하는 게 언론의 임무이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제보자나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고

검증하려고 하면, 제보자나 피해자는 자신을 의심하나며 크게 반발하고 제보를 취소하기도 한다. 또 한정된 시간 내에 제보자의 말을 검증하려 하기보다는 제보자의 말을 기반으로 폭로 대상에 대한 검증과 공격에 더욱 치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고수하고 제보자의 말을 꼼꼼하게 검증한 덕분에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제보자의 허위 제보 과정까지 모두 보도함으로써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2018년 풀리처상 탐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꼼꼼한 팩트체킹이 가져온 폐거였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미국 CBS와 영국 BBC의 사례

1) 미국 CBS의 사례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2004년 9월. CBS <60분>은 부시 대통령이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텍사스주 방위군 근무 시절 병역 특혜를 받았음을 보

부시의 텍사스주 방위군 근무 시절 <출처 - 필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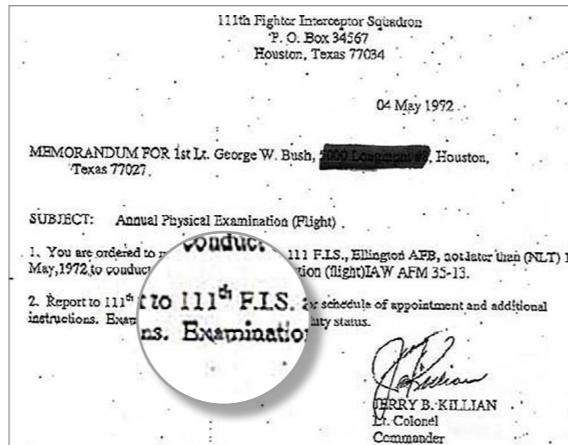
여주는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당시 상관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부시가 젊은 시절 베트남 전쟁 징집을 피하고자 청탁을 통해 주방위군에 입대했고, 입대한 뒤에는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CBS가 제시한 문서는 부시의 직속 상관이었던 제리 킬리언(Jerry B. Killian) 중령의 메모들이었는데, 이 문서를 CBS에 제공한 인물은 빌 버켓(Bill Burkett) 텍사스주 방위군 예비군 중령이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공개된 후, 문제제기가 들어왔다. 이 타이핑 문서의 폰트가 베트남전 당시의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었다. 특히, 서수를 나타내는 'th'는 당시 기술로는 어깨에 첨자 형태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보수 블로거가 문제를 제기 했으나 폭스나 ABC, NBC 등 주류 언론까지 가세해 CBS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엉친 데 덮친 격으로 제보자인 버켓이 처음엔 다른 예비역으로부터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언론의 공격을 받고나서는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CBS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자체조사 결과 오보라고 밝히고, <60분> 프로그램 담당 네 명을 해고하고, 앵커 맨 래더(Dan Rather)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방송하던 <60분>은 한 번 방송으로 바뀌었다. 즉, 한 편은 폐지된 것이다.

CBS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다. 또, 당시 여론은 문서는 조작됐을지 몰라도 문서 속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실제 부시 군 복무 시절 해당 서류를 담당했던 전직 여비서 메리언 캐리(Marian Carr Knox)는 “문서는 조작됐을 지언정, 문서 속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중언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CBS가 확실하지 않은 문서를 근거로 대통령 후보를 비판한 것은 비판받을 수



CBS가 제시한 부시 병역 비리 의혹 관련 메모. 당시 기술로는 첨자할 수 없는 서수를 나타내는 'th'가 기재돼 있다. <출처 - 필자 제공>

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팩트체킹 등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CBS의 잘못이 있다.

특히, 프로듀서 메리 메이프스(Mary Alice Mapes)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오보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메리 메이프스 프로듀서는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폭로 학대 사건 등 다수의 대형 특종을 내며 사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한다. 회사 일각에서 문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나, 메리 메이프스의 신뢰도와 위력에 눌려 이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CBS 분위기는 메리 메이프스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untouchable)’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한다. 아무리 특종을 많이 하고 뛰어난 저널리스트 도 신이 아닌 인간임이 분명하다. 인간인 만큼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제작진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설부론 예단의 오류다. 당시 많은 언론인들은 부잣집 도련님인 조지 부시가 병역 특혜를 받았음에 틀림없다고 광범위하게 믿었다고 한다. 부시의 병역 특례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정작 입증하는 데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CBS 뉴스부문 앤드루 헤이워드(Andrew Hayward) 사장은 “우리의 방송이 공정하고 믿을 만하고, 간섭받지 않는다고 믿는 수백만 시청자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사과 방송에서 밝혔다.

2) 영국 BBC의 사례

BBC와 토니 블레어 정부 간 공방은 2003년 5월 BBC가 영국 정부의 이라크 관련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BBC 국방전문기자인 앤드루 길리건(Andrew Gilligan)은 2003년 5월 29일 라디오 뉴스에서 ‘악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블레어 정부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가 45분 이내에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기관 보고서에 삽입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보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BBC의 폭로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및 영국 정부의 도덕성 시비로 번졌다. 블레어 정부는 절대로 정보 조작은 없었다면서 BBC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은 공방전을 벌였다. 이때 관심은 악명의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에 모아졌다. 국방부는 자신들의 자문관인 데이비드 켈리(David Christopher Kelly) 박사가 BBC와 인터뷰한 악명의 정부 소식통이란 점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 신분이 드러난 후, 켈리 박사는 2003년 7월 18일 왼쪽 손목의 동맥이 절단돼 숨진 채 발견됐다. 켈리 박사는 이라크 무기사찰단원으로 활동했으며 1999년까지 유엔 생물학전 수석 자문관을 지냈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게 악화되자 영국 정부는 브라이언 허튼(Brian Hutton)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허튼 경은 이라크 전쟁의 정

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블레어 정부가 정보기관이 작성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보고서를 과장, 조작했다는 앤드루 길리건 기자의 보도는 ‘근거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의 대상이 된 ‘45분’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관련 대목을 삽입했다’는 길리건 기자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블레어 정부가 켈리 박사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튼 보고서는 BBC가 오보가 나가는 과정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정부의 항의가 있은 뒤에도 이를 확인하고 바로 잡지 못하는 등 보도제작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허튼 보고서가 나오자 개빈 데이비스(Gavyn Davies) BBC 이사장, 그렉 다이크(Greg Dyke) BBC 사장이 동반 사임했다. BBC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1
2

1. 그렉 다이크 전 BBC 사장 <출처 - 필자 제공>

2. 앤드루 길리건 BBC 기자 <출처 - 필자 제공>



“

언론이 특종과 속보의 욕심을 누르고 팩트들을 교차검증하고 항상 반론을 청취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했을 때, 언론은 가짜 제보자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

허튼 보고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허튼 보고서는 길리건 기자가 블레이어 정부가 ‘45분’이라는 대목을 고의적으로 삽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보’라고 지적했다. 즉, 보도가 맞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오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허튼 보고서는 블레이어 정부에게는 면죄부를, BBC에는 치명타를 안겨주었다. 결국, 허튼 보고서의 핵심은 아무리 권위 있는 취재원이라고 해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거나 최대한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BBC는 이후 로널드 넬(Ronald Neil)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핵심은 BBC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길리건 기자가 취재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남긴 기록이 불완전했다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은 켈리 박사가 길리건 기자가 쓴 기사와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켈리 박사는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서 길리건 기자가 방송한 내용과 달리 자신은 이라크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켈리 박사가 국방부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국

방부에서 급료를 받지 않는 자문관에 불과하며 기밀 정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널리스트는 취재 시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음성녹음을 해야 하며, 차선책으로 수기를 남겨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익명의 취재원을 활용한 보도를 했을 때는 모든 인터뷰 기록을 보도 이후 16개월 이상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BBC는 익명의 취재원을 취재했을 때, 녹음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수업료를 혹독하게 치른 셈이다.

5·18 민주화운동 보도와 취재원의 신뢰도

박성현 MBC 시청자위원은 2019년 5월 7일 보도한 PD수첩 <2019, 광주가 분노한 이유>편에 대해 “이번 5·18 내용은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내용이어서 새로운 정보 제공보다는 정리 차원에 머문 느낌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PD수첩>은 5·18 광주 편을 기획하면서 5·18 당시 보안사 505보안부대에 근무했던 허장환 씨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

허장환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 육군 정보부대인 501정보여단에서 군사정보관(MIS, Military Intelligence Specialist)으로 근무하면서 미국에 군부 동향을 보고한 김용장 씨가 메가톤급 폭로를 할 예정인데, 이건 <PD수첩>과 단독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헬기를 타고 광주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과 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고, 그 회의 이후 광주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이뤄져 시민 54명이 숨졌기 때문에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 명령이었다는 것이 김용장 씨

주장의 핵심이었다.

이게 사실이면 그야말로 한국사를 새로 기록할 만큼의 메가톤급 중언이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 야망으로, 민주화운동을 사전에 진압할 욕심으로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억울한 사건이 되는 것이다. 전두환이 1980년 당시 서울을 희생양으로 삼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위험해서 서울보다는 규모가 작은 다른 도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추론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이즈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979년 부마항쟁 당시 부산의 계엄사령부를 방문해 계엄사령관 등과 함께 시위 진압 작전을 논의했다는 육군군수사령부의 공식 기록도 나와 전두환의 광주 방문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더불어 커지는 상황이었다. 허장환은 <PD수첩> 제작진에게 자신과 함께 피지로 가서

김용장 씨의 미 육군 501정보여단 근속 감사패 (출처 - 필자 제공)



김용장의 인터뷰를 단독으로 방송하자고 제안했다. 엄청난 특종 앞에 <PD수첩> 팀은 흥분했다. 게다가 공군 706보안부대장의 운전병이던 오원기 씨가 1980년 5월 21일 오전 전두환이 용산 미8군 헬기장에서 헬기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오후에 전두환이 광주에 도착했다는 주장과 맞물려 큰 파장을 낳았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오원기 씨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전두환이 광주로 내려갔다는 증언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원기 씨의 발언은 전두환이 오후에 광주에 도착했다는 김용장의 주장과 합쳐지면서 국민들에게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갔다는 짐작을 하게 만들었다. 오원기 씨의 증언까지 나오니, 김용장의 주장은 확고한 진리처럼 보였다. <PD수첩> 팀은 김용장 씨의 인터뷰를 방송하기만 하면 큰 반향을 몰고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는 셈이었다.

그러나 <PD수첩> 팀은 흥분하기에 앞서 허장환, 김용장의 주장을 꼼꼼하게 검증했다. 먼저 공군 항공운항기록을 살폈다. 공군 항공운항기록은 헬기 등의 비행기 탑승자는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공군 항공운항기록에는 1980년 5월에 당시 최규하 대통령,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간 탑승기록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탑승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계엄사령부 상황일지, 광주 전투교육사령부 상황일지, 5·18 평가일지, 중대별·대대별 병력일지 및 《광주사태 소요진압 평가와 교훈》이라는 책자 등을 살펴봤다. 그 어디에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로 내려왔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전두환이 광주에 직접 내려왔다는 증언은 김용장 씨가 직접 목격한 내용이 아니었다. 김용장은 이 내용을 정보원에게서 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PD수첩> 팀은 김용장 측에 당시 정보원의 연락처나 사진, 녹음자료, 미국 501정보여단의 보고자료 등 전두환이 광주에 왔다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를 요구했지만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물론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초실세여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 역시 입증의 책임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근무일지 또는 상황일지 등 교차검증이 가능한 영역이 남아 있다. 그 사이 <PD수첩> 팀은 당시 보안사에 근무했던 요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전두환을 광주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PD수첩> 팀은 김용장 씨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종의 유혹이 컸지만, <PD수첩> 팀이 검증한 바로는 김용장 씨의 발언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PD수첩> 팀이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한 이후, 김용장 씨는 국내로 들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JTBC 뉴스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연이어 출연해서 전두환 광주 방문 주장을 이어 나갔다.

그러다가, 2019년 5월 18일자 경향신문에서 김용장 씨의 신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번역가 설갑수 씨는, 김용장 씨가 미 육군 정보부대 정식직원인 군사 정보관이 아닌 통역요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등장한 군사정보관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김용장 씨의 신분이 군사정보관이 아니라, 통역관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김용장 씨는 “미국 501정보여단에서 한국인 근무자들의 직함은 통·번역관(Interpreter·Translator), 군사정보관(MIS), 언어관(Linguist) 등으로 시기에 따라 달리 불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장 씨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기안품의를 올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직 김용장 씨는 당시의 정보원에 관한 내용이나, 당시의 보고서 내용이나 군사정보관 관련 신분 자료들을 어느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19년 5월 김용장, 허장환의 ‘전두환 광주 방문 소동’의 원인은 특종이 주는 유혹에 빠져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김용장의 신분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상당수의 언론은 김용장이 미 육군의 군사정보관이란 주장을 여과 없이 소개했다.

문제는 제보자가 아니라 언론

이상 워싱턴포스트, 미국 CBS의 메모 게이트, BBC의 길리건 기자 보도 사태,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김용장, 허장환 주장의 사례들을 살펴봤다. 이들이 주는 교훈은 명료하다. 문제는 제보자가 아니라, 언론이라는 점이다. 제보자들은 실로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언론을 상대한다. 여기에 언론이 원칙을 갖고 제보자를 대하지 않으면, 자칫 제보자의 노리개가 되기 쉽다.

즉, 언론이 특종과 속보의 욕심을 누르고 팩트들을 교차검증하고 항상 반론을 청취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히 때, 언론은 가짜 제보자의 속임수에 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입견과 단정의 오류에서 벗어나 반대의 경우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려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거짓 제보자에게 놀아나지 않는 지름길이다. 즉, 언론에 필요한 것은 바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이다. ☞